
주 제 발 표

제1주제 : 가짜뉴스의 정의 및 국내·외 대응 현황

정 세 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가짜뉴스의 정의 및 해외 대응 현황

- 가짜뉴스(Fake news)의 정의, 사례 및 대응책 -

정 세 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1. 가짜 뉴스의 정의 및 사례

1) 정의

가짜 뉴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가짜 뉴스가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해 왔던 현상이고 풍자, 루머, 오보 등 여러 유사 개념들과 혼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정의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정보(misinformation)이다. 하지만 모든 잘못된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는 간혹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를 내지만 오보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오보는 단순 실수나 사실 확인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안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의 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와 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황용석 · 권오성, 2017).

형식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외형상으로는 실제 뉴스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컴퓨터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뉴스의 틀을 복제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언론사처럼 보이게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한상기, 2017). 특히 뉴스의 틀을 갖춘 가짜 뉴스는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에 비해 더욱 신뢰를 받기 때문에(오세욱·박아란, 2017) 기자의 바이라인이나 언론사 제호 등을 삽입해 겉모습으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정교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가짜 뉴스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뉴스 형태의 거짓 정보라 정의할 수 있다.

2) 가짜뉴스 사례

가짜 뉴스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슈가 됐던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①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Pope Francis shocks world, endorses Donald Trump for president, releases statement)

2016년 7월, 가짜 뉴스 사이트인 WTOE 5 News 웹사이트에 등장한 이 뉴스는 소셜 미디어를 타고 전세계로 순식간에 퍼졌고, 또 다른 저명 가짜 뉴스 사이트 'Ending the Fed'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연말까지 페이스북에서 90만 번 이상 공유됐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② 오바마 대통령, 국기에 대한 맹세 금지 행정명령 (President Obama signs executive order banning the Pledge of Allegiance in schools nationwide)

가짜 뉴스 사이트 ABCNews.com.co 의 기사로, 2016년 페이스북에서 200만 번 이상 공유되며 가짜 뉴스 중 가장 많은 공유를 기록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뉴스로, 과거 유포된 가짜 뉴스를 다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위키 리크스, 힐러리 클린턴 IS에 무기 판매 (WikiLeaks confirms Hillary sold weapons to ISIS)

2016년 8월, 우파 웹사이트 The Political Insider는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적극적으로 IS를 포함하여 이슬람 지하디스트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이 뉴스는 교묘한 화면 캡처와 논리적 비약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6년 7월 줄리언 어산지의 인터뷰가 있었으나, 그 내용은 미 국무부가 2011년 카다피 제거를 위해 리비아 반군에 대한 무기판매를 승인했고, 카다피 정부 전복 이후 무기의 일부가 시리아 지하디스트와 IS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클린턴 이메일에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The Political Insider가 말한 대로 “IS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어산지의 인터뷰 화면을 편집해서 그럴 듯하게 꾸민 가짜뉴스였다.

(2) 프랑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프랑스는 미국 대선의 가짜 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하여 르몽드, 리베라시옹, AFP 등 37개 언론이 협력해서 팩트체크 사이트 ‘크로스체크(CrossCheck A collaborative journalism project)’를 만들어 여러 형태의 가짜 뉴스를 검증하고 대선에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했다. CrossCheck¹⁾이 검증한 프랑스 대선 관련 가짜 뉴스 일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마크롱 후보 역외 계좌 개설 여부 (Did Emmanuel Macron open an offshore account?)

1) <https://crosscheck.firstdraftnews.com>

대선 결선투표 나흘 전인 5월 3일, 마크롱과 르펜의 토론을 앞두고 마크롱의 사인이 담긴 역외 계좌 개설 서류가 온라인에 업로드 됐고, 토론에서 르펜은 마크롱이 바하마에 역외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루머를 언급했다. 다음날 마크롱 선거본부에서 루머가 거짓이라고 밝혔고, 실제로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서류 안의 사인은 마크롱의 사인과 차이가 났고, 전반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에마뉼엘 마크롱, 사우디로부터 재정적 지원 받았나? (Was Macron's campaign for the French presidency financed by Saudi Arabia?)

마크롱의 경쟁자인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는 위 제목과 같은 기사를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으나 이 뉴스는 AFP통신 등 5개의 언론이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덴마크 일간지 뉴스를 짜깁기한 내용에 Le Soir 라는 매체명을 붙여서 만든 가짜 뉴스였고 르펜은 가짜뉴스로 드러난 뒤 30분 만에 트윗을 삭제했다.

(3) 독일

독일도 2017년 9월 총선 시기에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는 별도의 정부기관 창설과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처벌 등 매우 민감하게 대처했다²⁾. 극우세력이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난민들이 범죄’라는 선동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로 메르켈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공격할 것을 우려한 부분도 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 독일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1/0200000000AKR20170121011700082.HTML>

① 시리아 난민 청년, 테러범 조작 사진 유통에 대해 페이스북 제소

2017년 시리아 난민 아나스 모다마니(19)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입국 시리아 난민인 그는 난민촌에서 메르켈 총리와 사진을 찍었고 그 장면은 메르켈의 난민 포용 정책의 상징처럼 당시 주요 일간지를 장식하고 이후에도 난민 정책을 상징하는 단골 사진으로 쓰였다. 하지만 독일 극우파들이 이 사진을 조작하여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 테러범 의상과 복면을 그의 사진에 합성하여 메르켈이 테러리스트와 사진을 찍었다는 가짜 뉴스는 물론, 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에게 용의자 의혹을 씌운 게시물이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녔다. 개인의 노력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페이스북 사진들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이 회사 차원에서 삭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②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

메르켈이 아돌프 히틀러의 딸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자주 반복되어온 가짜 뉴스로, 독일 내 반 메르켈 진영 뿐 아니라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벌이면서 독일과 메르켈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 중심으로 가끔씩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쪽은 히틀러의 생모 사진과 메르켈의 젊었을 때 사진을 비교하며 닮았다고 주장하거나, 과거 히틀러와 손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놓고 두 사람의 유사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뉴스의 진위여부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 EU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일 메르켈의 리더십과 히틀러로 상징되는 제국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려고 하는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짜뉴스 대응 현황

1) 법적 규제를 통한 대응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규제일 것이다. 실제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가짜 뉴스 문제가 떠오르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법체계 안에서 가짜 뉴스를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짜 뉴스 금지법의 발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법적 규제를 논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 개입은 콘텐츠 검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짜 뉴스 강제 규제의 첫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³⁾에도 법 적용의 대상이 혐오 발언이라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 자율 규제를 통한 대응

법적 규제 외의 대안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 규제가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뉴스 유통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소비 현황 분석을 보면, 전세계 26개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45.8%가 대체로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접하며 이는 37.8% 수준인 TV를 통한 뉴스 소비보다 높은 수치였다(김선호·김위근, 2016). 온라인 플랫폼 중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 등이 있다. 일상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들은 일반 뉴스 뿐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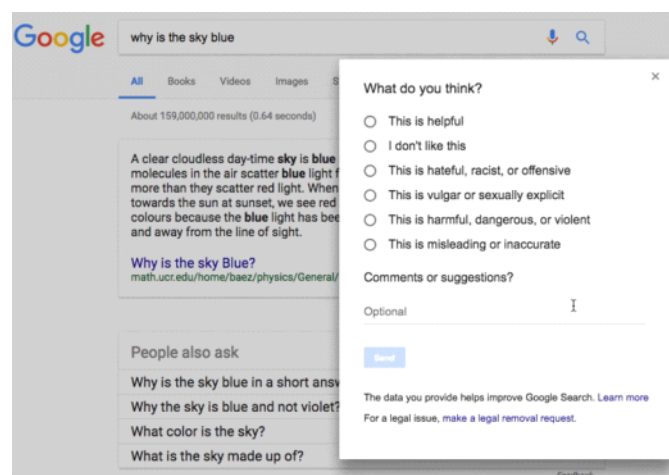
3) 독일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 가짜 뉴스의 이용 및 전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대응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짜 뉴스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짜 뉴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돈이 된다는 것이다. 다량의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광고료를 얻는 것이 가짜 뉴스의 주된 수익구조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짜 뉴스 유포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 게재를 제한함으로써 가짜 뉴스로 인한 수익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11월부터 거짓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구글 애드센스(AdSense)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내 놓았다. 애드센스는 온라인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 매체 보유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이전부터 음주·흡연 관련 콘텐츠, 성인물, 폭력물 등 유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규제해 왔다. 이에 더해서 ‘오도하는 콘텐츠(misrepresentative content)’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여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게 하였다.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광고 파트너 계약을 고쳐 가짜 뉴스 생산자의 간접광고 제한 정책 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림 1> 구글 검색어 자동 완성에 대한 피드백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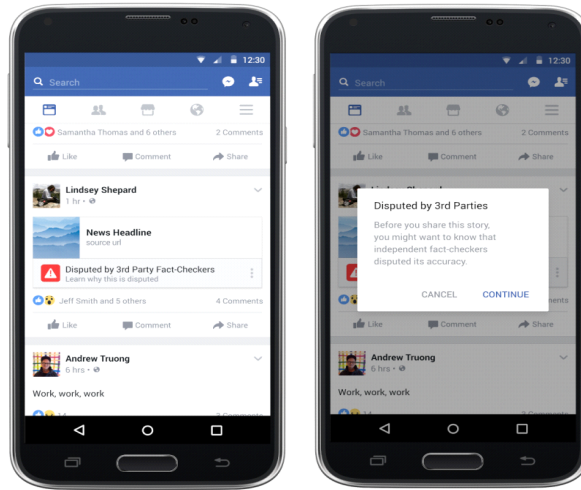
출처: www.google.com



둘째는 알고리즘 개선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관심사항과 성향에 따라 이들에게 잘 맞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나 페이스북 뉴스피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존 신념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가짜 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거꾸로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조정할 경우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가 정보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2017년 1월 가짜 뉴스를 뉴스피드 노출 순위에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구글도 검색 결과에 가짜 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색 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다.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정보는 상위 검색 결과로, 신뢰도가 낮은 정보는 하위로 내려 보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부정확한 검색 결과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은 제3자(third-party)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보다 검증된 정보의 제공이다. 페이스북은 언론사와 협업하여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Facebook Journalism Project)를 통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언론인 교육, 뉴스 상품 공동 개발, 일반인을 위한 교육의 3가지 핵심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콘텐츠 공급을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뉴스 이용자의 뉴스 선별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은 뉴스 검증 기관 포인터(Poynter)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뉴스일 경우 ‘논쟁 중(disputed)’ 표시를 달아 뉴스 피드 노출 빈도를 낮추고 있다. 이처럼 ‘논쟁 중’인 기사는 공유할 수 있지만 공유 전에 해당 기사의 정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경고문을 띄운다. 구글도 프랑스 대선 당시 르 몽드, 리베라시옹, AFP 등 주요 언론과 협력하여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크로스 체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림 2〉 페이스북 ‘논쟁 중(disputed)’ 표시
출처: 페이스북 뉴스룸(<https://newsroom.fb.com>)



3) 팩트 체크를 통한 대응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외에도 팩트 체크를 통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팩트 체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새롭게 생긴 개념은 아니고 본래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저널리즘의 종류이다.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게끔 도와준다. 처음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1988년 미국 대선이다. 당시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는 상대방인 민주당 듀카키스를 향해 강도 높은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부시가 승리함으로써 당시 선거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특히 근거 없는 파상공세를 통한 네거티브 전략 자체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검증단계 없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 CNN 기자 브룩스 잭슨은 정치 광고를 검증하는 ‘애드워치(AD Watch)’와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 체크(Factcheck)’ 코너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팩트 체크 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다(마동훈·오택

섭·김선혁, 2013). 또한 2003년 펜실베이니아대 애너버그 공공정책 센터의 ‘팩트 체크 닷오알지(Factcheck.org)’가 오픈하여 언론사로부터 독립된 팩트 체크 기관이 출범하였고, 2011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팩트 체크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팩트 체크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듀크대 Reporters’ Lab 은 전 세계의 팩트 체크 사이트와 조직이 134개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림 3〉 미국의 대표적 팩트 체크 사이트 중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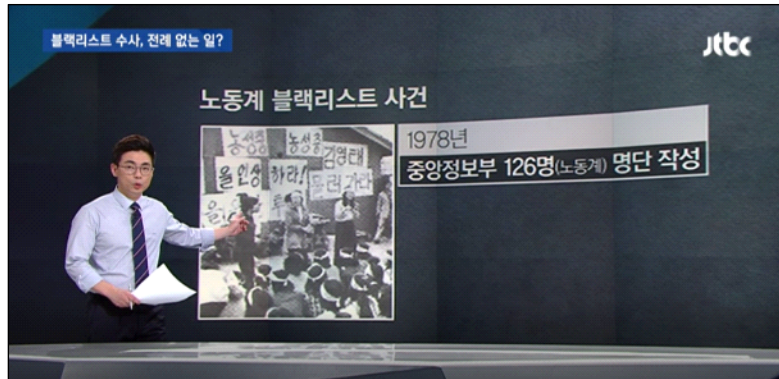
〈팩트 체크닷오알지〉 홈페이지

출처: www.factcheck.org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팩트 체크가 조명을 받았다. 대선 기간 동안 팩트 체크를 한 매체는 모두 28개였고, JTBC 와 SBS는 대선 이후에도 고정적인 코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언론사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3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SNU팩트 체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림 4〉 JTBC <팩트 체크> 출처: JTBC 홈페이지



〈그림 5〉 SBS <사실은> 출처: SBS 홈페이지



팩트 체크가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은 언론사의 기본적인 책무로, 모든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언론이 뉴스의 사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지 못한 채 기사를 내보내게 하고 있다. 형식적 객관성을 앞세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he said, she said journalism)’ 식의 보도는 언론 스스로를 방관자의 자리로 내몰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팩트 체크는 뉴스의 사실성을 판정해주는 심판자의 역할을 언론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 검증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스스로 중립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부여한다(정은령, 2017).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

앞서 언급한 법적 대응과 자율 대응은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전략인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은 뉴스 소비 과정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생산 과정에 개입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징벌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시장의 자정(自淨) 기능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규제의 일종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이제 막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가 스스로 좋은 뉴스를 가려서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팩트 체크도 뉴스의 참 거짓을 알려줌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팩트 체크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사후 대처 방안이다. 특정 뉴스에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 전수를 대상으로 팩트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퍼져버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팩트 체크의 효과와는 별개로 미디어 교육을 통해 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모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초기 개념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근래에는 미디어 콘텐츠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Aufderheide, 1993). 특히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기존에는 미디어만 할 수 있던 정보 생산을 보통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된 요즘에는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과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감수성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며 성장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미디어 활

용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장점을 많이 갖지만 이것이 수준 높은 미디어 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중학생의 82%가 뉴스와 네이티브 광고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Wineburg, McGrew, Breakstone, & Ortega, 2016), 이처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보의 양과 접근성은 급격히 향상된 데 비해 콘텐츠를 올바로 이용하는 능력은 이에 맞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구 사회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가짜 뉴스 이슈가 부상하며 가짜 뉴스에 중심을 둔 미디어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École)’ 행사를 매년 진행하는데 2017년에는 ‘정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민 교육에 힘을 모았다. 또한 프랑스 국립미디어센터는 ‘대선과 팩트 체크’, ‘미디어 집중 현상’, ‘정보 출처’, ‘정보와 광고의 구분’, ‘정보, 선전, 음모론의 구분’ 등의 주제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진민정, 2017).

〈그림 6〉 ‘정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7년
프랑스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 출처: 프랑스
국립미디어센터 공식 트위터



4) 기사 형식을 띤 광고

미국은 가짜 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류동협, 2017). 워싱턴 주는 온라인에서 가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 과정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성공 사례는 모아서 온라인 상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올바른 정보 분별력을 키워서 최소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 전체가 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언론 등 관련 기관은 간단한 교육 자료나 가짜 뉴스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함으로써 가짜 뉴스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제 도서관 협회 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는 ‘가짜 뉴스 식별법(How to spot fake news)’이라는 인포그래픽을 배포하여 “(1) 출처를 확인할 것 (2) 기사의 전문을 읽을 것 (3) 작성자를 확인할 것 (4) 뒷받침하는 정보가 올바른가? (5) 뉴스의 날짜를 확인할 것 (6) 농담은 아닌가? (7) 나의 생각이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가? (8)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 과 같은 유용한 조언을 담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했다.

〈그림 7〉 가짜 뉴스 식별을 위한 인포그래픽
한국어 버전
출처: IFLA 홈페이지
(<https://www.ifla.org/publications/node/11174>)



〈표 1〉 대응 방안별 비교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리터러시 교육
범위	일반적 (전체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구체적 (특정 뉴스)	일반적
주체	정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언론사,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대응 시기	사후적	사후적	사후적	사전적
장점	강제적 실효성 높음	효율성 높음	비교적 용이	논란의 여지가 적음
단점	논란의 여지	기술 구현 비용	객관성 기술 구현 비용	많은 시간과 비용

참고문헌

- 김선호 · 김위근 (2016).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류동협 (2017).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미국의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1호, 86-89쪽.
- 마동훈 · 오택섭 · 김선혁 (2013). <저널리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한국형 팩트체킹 모델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세욱 · 박아란 (2017).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전자매체본]. <미디어 이슈>, 3권 3호, URL: <http://www.kpf.or.kr/site/kpf/research/selectMediaPdsView.do?seq=574068>
- 정은령 (2017). 팩트체킹 뉴스 의미와 한계. <관훈저널>, 143호, 19-25쪽.
- 진민정 (2017). 프랑스 끌레미의 ‘2017 언론주간’ 들여다보기. <미디어리터러시>, 1호, 76-79쪽.
- 한상기 (2017). 가짜 뉴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 방안[전자매체본]. <KISA Report>, 2호, 3-7쪽.
URL:http://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324&cPage=&ST=TC&SV=
- 황용석 · 권오성 (2017). 가짜 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6권 1호, 53-101쪽.
- Aufderheide, P.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Aspen Institute, Communications and Society Program,
- Jeong, S. H., Cho, H., & Hwang, Y. (2012). Media literacy interv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mmunication, 62(3), 454-472.
- Wineburg, S., McGrew, S., Breakstone, J., & Ortega, T. (2016). Evaluating Information: The Cornerstone of Civic Online Reasoning. Stanford History Education Group. Retrieved from <https://sheg.stanford.edu/upload/V3LessonPlans/Executive%20Summary%202011.21.16.pdf>

참 고 자 료

(주제발표 파워포인트 자료)

가짜 뉴스 대응 사례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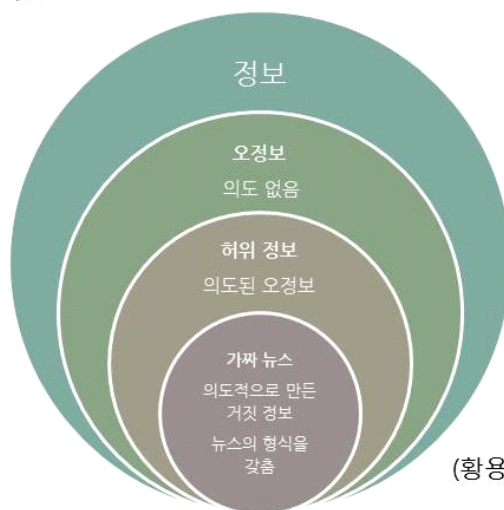
정세훈 (고려대학교)

목차

- ❖ 가짜뉴스 정의 및 사례
- ❖ 가짜뉴스 대응 및 효과
 - ❖ 자율규제
 - ❖ 팩트체크
 - ❖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가짜 뉴스란?

- ❖ 내용적 측면: 사실과 다른 정보(오정보) /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허위 정보)
- ❖ 형식적 측면: 뉴스의 외형



(황용석·권오성, 2017 참조)

가짜 뉴스 사례

- ❖ 오바마 대통령, 국기에 대한 맹세 (Pledge of allegiance) 금지 행정명령
 - 가짜 뉴스 사이트 ABCNews.com.co의 기사
 - 2016년 가장 많이 공유된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사례

- ❖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 가짜 뉴스 사이트 WTOE 5 News에 게재
 -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 → 페이스북에서 90만 번 이상 공유



가짜 뉴스 사례

- ❖ 위키 리크스, 힐러리 클린턴 IS에 무기 판매
 - 극우 성향 웹사이트 The Political Insider에 게재
 - 위키리크스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IS 등 이슬람 테러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내용



가짜 뉴스 사례

- ❖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
 - 메르켈 총리 어린시절 사진을 히틀러와 히틀러 모친의 사진 등과 비교하며 유사성 주장
 - 독일 내 반 메르켈 진영 뿐 아니라 메르켈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



목차

- ❖ 가짜뉴스 대응
 - ❖ 자율규제
 - ❖ 팩트체크
 - ❖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 ❖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법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미디어 교육
주체	정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	언론사, 공공기관 교육기관(49%)	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 언론사
범위	일반적 (전체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구체적 (특정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대응 시기	사후적	사후적	사후적	사전적
장점	강제성	효율성 높음	비교적 용이	논란의 여지가 적음
단점	논란의 여지	기술 구현 비용 기술의 실패	객관성 기술 구현 비용	시간과 비용

자율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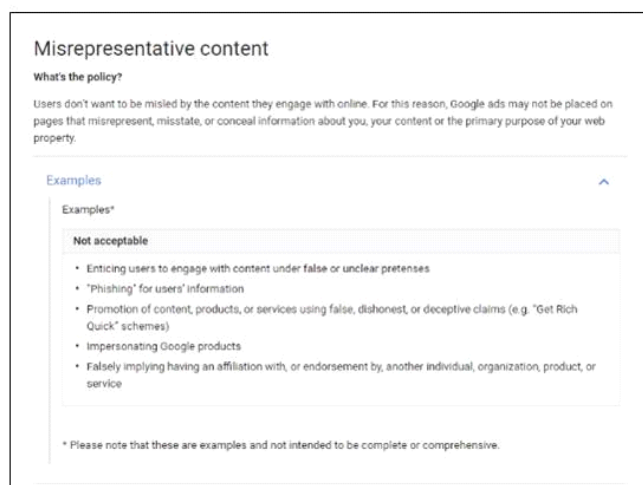
❖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 중심 대응

❖ 주요 대응 방법

- ① 경제적 이익 제한
- ② 알고리즘 조정
- ③ 제 3자(third-party) 전문가와의 협업

경제적 이익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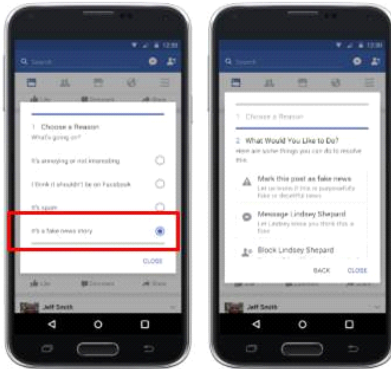
- 가짜 뉴스 생산의 주요 원인: 온라인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제한
- 구글: 2016년 11월부터 허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misrepresentative content)는 구글 애드센스(AdSense)서비스에서 제외
- 페이스북: 광고 파트너 규약을 개정하여 가짜 뉴스 생산자의 간접광고 제한 정책 도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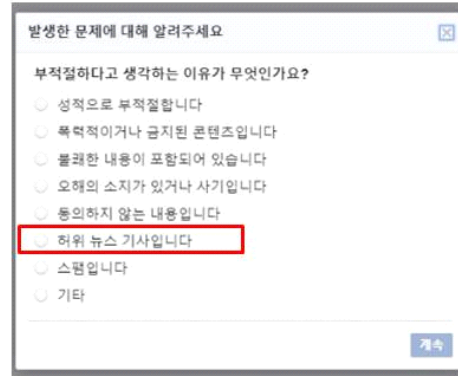
구글의 애드센스 운영 정책 - 금지 항목

알고리즘 개선

- 검색엔진 검색 결과나 페이스북 뉴스피드 등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
- 역으로 알고리즘 조절을 통해 가짜 뉴스가 정보망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페이스북 & 구글: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가짜 뉴스의 노출 순위를 낮추는 알고리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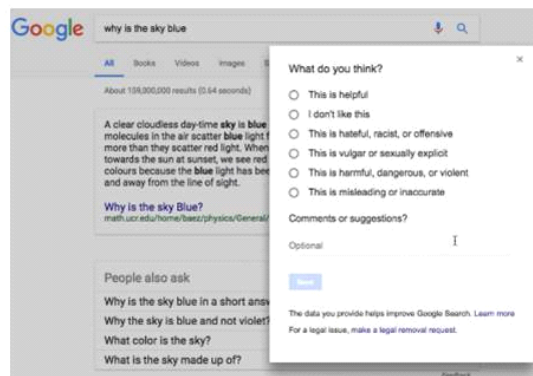
페이스북 가짜뉴스 신고 메뉴



페이스북 가짜뉴스 신고 메뉴: 국내

알고리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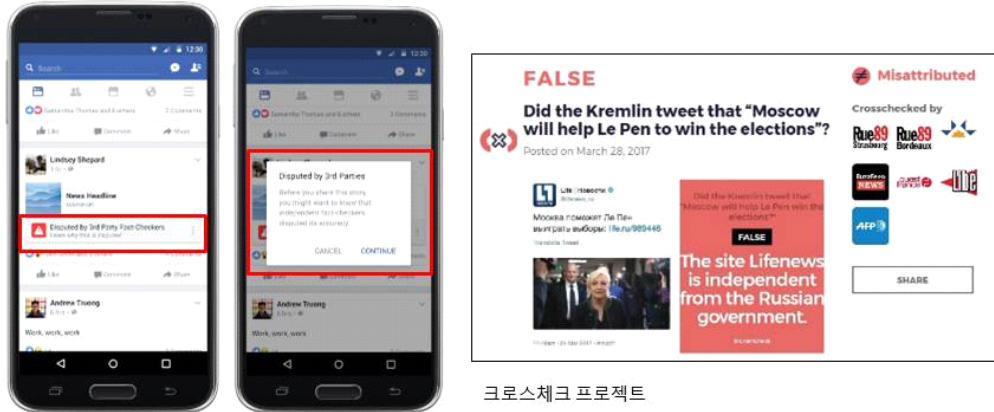
- 구글



구글 가짜뉴스 신고 메뉴

제3자 전문가 협업

- 제3자(third-party)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제공
- 페이스북: 뉴스 검증 기관 **포인터(Poynter)**를 통해 뉴스 내용을 확인한 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논쟁 중(disrupted)' 표시를 달고 뉴스 피드 노출 빈도를 낮춤. 공유시에도 기사의 정확도에 의심이 간다는 경고문 노출.
- 구글: 프랑스 대선 당시 프랑스 주요 언론들과 협력하여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진행



페이스북 논쟁 중 표시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팩트 체크

- ❖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등의 정치·사회적 발언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저널리즘의 일종
- ❖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뉴스 해석의 지침을 제공
 - ➔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
- ❖ 1988년 미국 대선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2000년대 초반 팩트체크닷컴알지(Factcheck.org), 팩트체커(The Fact Checker), 폴리티팩트(Politifact) 등 주요 팩트체크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
- ❖ 국내에서는 JTBC, SBS 등 언론사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진행

Factcheck.org - 대학 독립 연구기관

- 펜실베이니아대학 애너버그 공공정책 센터에 기반을 둔 팩트체크 시스템
- 2005년 설립된 최초의 팩트체크 기관
- 전문 검증자 및 경영자, 펠로우 등으로 구성된 팩트체크팀이 일평균 1건 정도의 팩트체크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
- 후원금 기부금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독립성 확보
- 정치 뿐만 아니라 과학 이슈나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루머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짐

Share The Facts



Multiple websites



"President Trump Signs Executive Order Stripping NFL Of 'Non-Profit' Status"

Multiple websites – Monday, October 9, 2017

SHARE READ MORE

FACTCHECK.ORG

Factcheck.org - 대학 독립 연구기관

www.factcheck.org

HOME
ARTICLES
ASK A QUESTION
VIRAL SPREAD
ARCHIVES
ABOUT US
SEARCH
MORE

SCICHECK THE WIRE

Did Air Quality Improve Under Obama?

By: Vanessa Schepers | Posted on September 22, 2017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s 2017 air quality report does say that 38.5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breathing "unhealthy air," based on EPA data from 2013 to 2015 for two of the most common air pollutants. However, that figure is down from 58 percent of the population before Obama took office. Pruitt also failed to mentio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updated the standard for the top ten of the six air pollutants that the EPA regulates under the Clean Air Act, one of which hadn't changed since the early 1970s, when the act was first put into law.

Pruitt made his claim on Sept. 11 during an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s:

Pruitt, Sept. 11: Fairly badly lack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s being the environmental record. Really? He was the environmental record? He's the gold standard, right? He left us with more Superfund sites than when he came in. Air quality standards, 40 percent of the country, nonattainment.

This isn't the first time Pruitt has criticized Obama's environmental record. In May, he cited the same 40 percent figure on Hugh Downs' radio show, adding, "What exactly did [the Obama administration] accomplish for the environment that [this] is so excited about?" Pruitt has a right to his opinio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shied from the "gold standar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he drew a statistic — that 40 percent of Americans live in nonattainment areas — without providing any context. In fact, there's evidence of improvement in air quality under Obama.

Pruitt also kept telling the whole story when it comes to Obama's action on Superfund sites.

ASK FACTCHECK

Q: Did President Donald Trump shut down a service dog training program for veterans?

A: No.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ended its contract with the program and told us that the president was not a factor.

Read the full question and answer. View the Ask FactCheck archives. Have a question? Ask us.

Donate Now
Because facts matter.


SciCheck
Factchecking science-based claims.


Health Watch
Factchecking the health news deluge.


Trump Transcripts
Associated news right of

Share The Facts



Scott Pruitt
EPA Administrator

Lacks Context

Obama left 40% of the U.S. with air quality that doesn't meet EPA standards.

Interview with Washington Examiner – Monday, September 11, 2017

SHARE READ MORE

FACTCHECK.ORG

- 27 -

The Fact Checker - 언론사 내부 조직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

Fact Checker The Truth Behind The Rhetoric | By Glenn Kessler

[Congress](#) · [Issues](#) · [Trump](#) · [2020 Candidates](#) · [About](#)

Ad created by Google

Analysis
President Trump and accusations of sexual misconduct: The complete list

There are at least 13 women who have accused Trump of sexual misconduct. Here's the complete list, with their evidence.

Mag Kelly · [Donald Trump, For the Record](#) · 4 hours ago

Analysis
Meet Paul Ryan's 'Cindy,' a single mom who he says gets \$700 from the tax bill

House Speaker Paul Ryan's numbers add up, to a certain extent. But he only tells half of the story.

 Glenn Kessler · [Congress, Economic Policy](#) · 1 day ago

Analysis
Ivanka Trump touts GOP tax cuts with data borrowed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Trump claims the U.S. doesn't invest enough in young children, and her figures come from an unlikely source for a Trump official.

 Nicole Lewis · [Issues](#) · 2 days ago

PolitiFact.com - 언론사 내 독립기관

- 템파베이 타임즈(Tampa Bay Times)의 워싱턴 지국에서 운영하지만 언론사 내부 독립 기구로 운영
- 2007년 출범
- 진실-거짓을 6단계로 나누어 보여주는 Fact-O-Meter 외에 말 바꾸기 검증(Flip-O-Meter), 공약 준수 검증 (Promise Meter)도 진행



MARSHA BLACKBURN

"When Phoenix dropped its sanctuary city policy in 2008, its murder rate fell 27 percent the following year."

— *PolitiFact National* on Friday, November 17th,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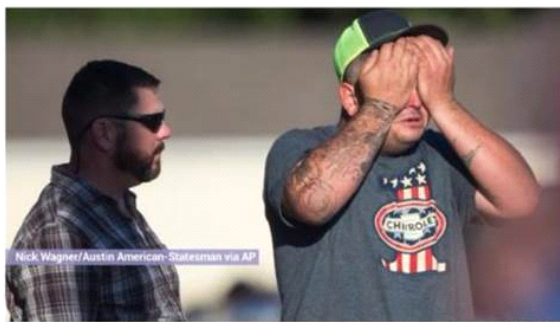
Additional factors likely at play

	진실: 정확한 발언으로 주요 내용 누락 없음
	대부분 진실: 정확하지만 해명이나 보충 자료 필요
	절반의 진실: 부분적으로 정확하지만 상세 정보가 누락
	대부분 거짓: 진실의 요소는 존재하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결정적 사실이 무시됨
	거짓: 정확하지 않음
	새빨간 거짓말: 정확하지 않으며 허무맹랑한 주장임



Fake news: No proof Antifa, communism compelled Texas shooter Devin Kelley

By Joshua Gulin on Monday, November 6th, 2017 at 5:17 p.m.



Autoplay: On | Off
A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spokesman said Nov. 6, 2017, that Devin Patrick Kelley had been fighting with relatives prior to the Nov. 5 massacre in Sutherland Springs, Texas.



No, Sarah Huckabee Sanders did not dress up as a KKK member for Halloween

By Manuela Tobias on Monday, October 23rd, 2017 at 1:10 p.m.



미디어 교육

- ❖ 자율규제 및 팩트 체크 (생산/유통자 중심)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뉴스 소비자 중심
-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 미디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평가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발전
-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달리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 예상

프랑스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la 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Ec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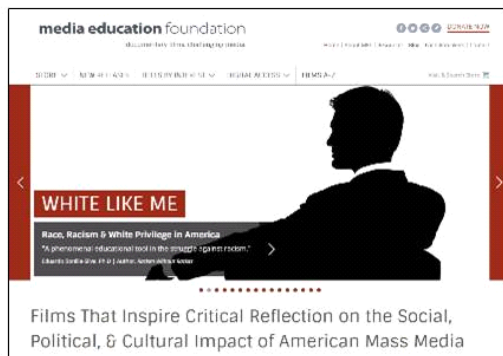
- 프랑스 국립미디어 센터(CLEMI)에서 주최하는 교육 활동
-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함
- "뉴스의 해독은 민주주의의 주요 쟁점 " "청소년과 아동에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좌표를 알려주고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핵심 지식 제공 "
- 언론사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짐(2017년의 경우 1,850개 매체가 참여)
- 주제에 따른 교육 자료를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뉴스 읽기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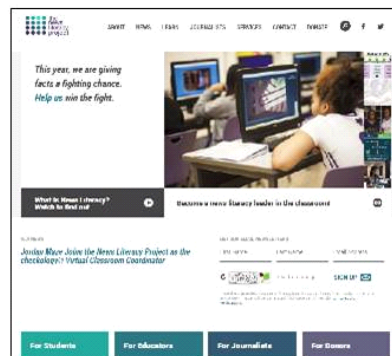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교육 가이드북 <라 파미외 투테크랑>

미국 - 미디어 교육의 의무화

- 1990년대 초반 영어 교육 과정의 일부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처음 등장
-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 정부 단위로 각기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짐
- 대학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도 증가하는 추세,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도 개설
- 미디어교육재단(MEF),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the news literacy project) 등 비영리기관 (NGO)
- 미디어교육재단 <http://www.mediaed.org/>
-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www.thenewsliteracyproject.org



미디어교육재단 홈페이지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홈페이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법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미디어 교육
주체	정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	언론사(72%) 공공기관(66%) 교육기관(49%)	교육기관(78%) 정부, 공공기관 (68%) 언론사(61%)
범위	일반적 (전체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구체적 (특정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대응 시기	사후적	사후적	사후적	사전적
장점	강제성	효율성 높음	비교적 용이	논란의 여지가 적음
단점	논란의 여지	기술 구현 비용 기술의 실패	객관성 기술 구현 비용	시간과 비용

가짜 뉴스 대응방안 효과

❖ 자율 규제

❖ 팩트 체크

❖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

실험 연구 1 (자율규제 & 리터러시)

◆ 설문 개요

- 3(정보량: 많음, 중간, 적음)X2(미디어교육: 유, 무)
- 만 20~70세 남녀 713명 대상

	정보량 많음	정보량 중간	정보량 적음
교육 진행	120	119	119
교육 진행 안함	116	121	118

❖ 실험 진행

- 미디어 교육 → 카톡 메시지 확인

❖ 측정 문항

- 가짜 뉴스 인식, 카톡 링크 확인, 전파 의도

자율규제 효과 실험물(카카오톡)



〈정보량 적음(현행 기본정보)〉



〈정보량 중간(+ 언론사 등록 여부)〉



〈정보량 많음
(+ 언론사 등록여부 + 심의 여부)〉

실험물(미디어 교육)

인터넷 신문 위원회, 모바일 매진자 업체, 온라인 뉴스 공유 시 출처 정보 노출 협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가짜 뉴스 퇴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카카오, NHN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출처 정보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정보 표시제는 예신자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링크)에 반드시 출처 정보를 노출하는 제도로써 정보 유통 효과를 투명화 하여 가짜 뉴스 퇴출을 촉진하는 취지이다.

정보(링크)와 함께 노출되는 출처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사 내용이 심의나 조정을 받고 있을 경우 표시
- 기사 작성 일시
- 작성자(기자명)
- 사이트 유형(언론사 여부)
- 사이트 등록일

인터넷신문위원회 김재진 사무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은 가짜뉴스로부터 정보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며 "학원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모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정보 표기 예시>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http://www.dailypada.com/articles/565304102826864>
(산학) 통스타 A장 공급일정,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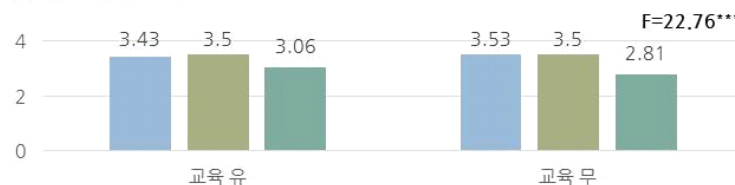
(산학) 통스타 A장 공급일정, 왜?
안기 로고 옆에 A장이 지난날,
www.dailypada.com

* 합제 실적 중인 기사일
작성일자 : 2016. 5. 25. 20:28:03
작성처 : 중앙우 리퍼
담당 : 양병 영 사역자
※ 인터넷신문위원회
사이트 등록일 : 2016.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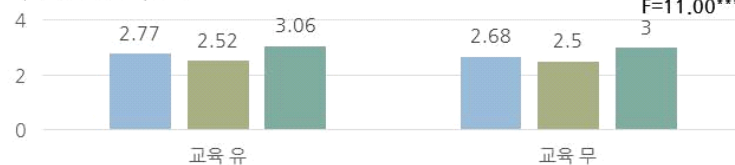
공표 155

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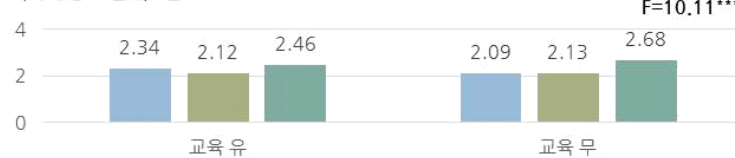
<가짜뉴스 인식>: 증가



<카톡 링크 확인>: 감소



<카톡 링크 전파>: 감소



■ 많음 ■ 중간 ■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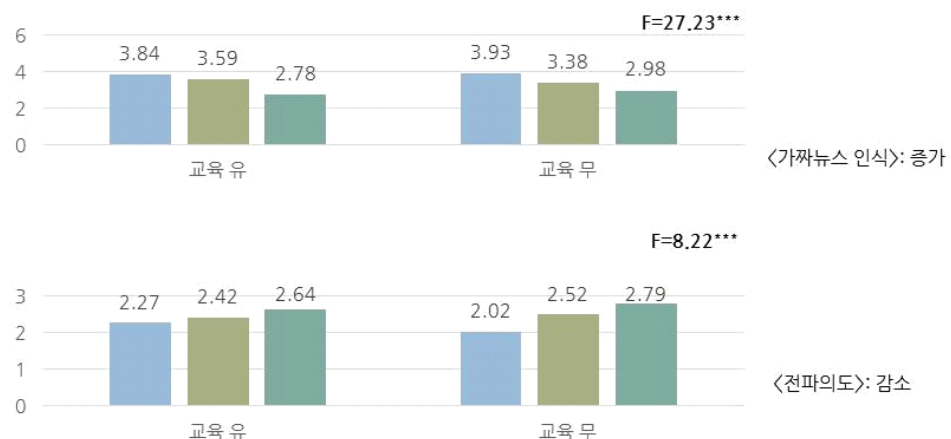
실험물(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제시 예시〉

실험 결과

Q: 방금 본 뉴스는 가짜 뉴스일 것이다



결론

- ❖ 법적 규제의 효과성 및 한계
 - ❖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 ❖ 언론사 및 독립기관의 팩트체크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 ❖ 충분한 동기 부재 (자율규제: 광고제한이나 알고리즘 기술 구현 비용)
 - ❖ 법과 정책은 “자율규제와 “팩트체크”를 지원 (또는 강제)하는 방향

감사합니다